

# WTO DDA농업협상의 영향과 UR의 교훈을 고려한 당면 정책과제

이 글은 WTO국민연대 워크숍에서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충실 교수가 발표한 글을 토대로 한농연 정책조정실 한농연에서 재구성 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각종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과 이로 인한 국내 농업의 몰락은 일파만파 농촌 공동화현상을 부추겨 왔다. UR협상 이전까지의 여러 농업통계 수치는 UR협상 체결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생산 주체인 농민들의 농업체감위험지수도 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

당시 정부가 쌀 관세화유예를 위해 미국과 사전적·지속적인 비밀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UR협상 결과는 너무도 단선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학계와 농민단체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농업협상 전략은 WTO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농업계의 불안심리를 더욱 가중시켜왔다. 결국 한농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농민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면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의 방향 제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UR협상을 통해 얻어진 뼈저린 교훈을 토대로, 올 한해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영향과 정부

의 정책과제에 대해, 경북대학교 김충실교수(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불과 10년전에 우리는 UR협상의 위협에 저항하는 극렬한 농민시위를 경험했고, 이에 대응한 갖가지 농정 프로그램들이 각 정권마다 제시되어 왔다. UR 협상 체결 정권인 YS정권은 수입조를 농업투융자 사업에 투자하여 농업충격의 해법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DJ정권도 YS정권의 농정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농정개혁의 기치아래 대통령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를 가동하였지만,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농정실패 정권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발등에는 DDA 농업협상이라는 불덩이가 떨어져 있으며, 2004년에는 민족의 생명산업인 쌀의 관세화 여부에 대한 협상이 벌어질 예정이다.

농산물 개방 방식과 폭을 다룰 DDA 농업협상이 당장 이달 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농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상과



◀ 지난 2003년 1월 24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건 세계경제포럼(WEF)에 반대하여 창설된 세계사회포럼(WSF)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시민들.

〈표 1〉 UR이행의 거시경제 및 농업부문 효과  
('92 경제기준)

구 분	거시경제 효과	농업부문 효과
무역수지(십억 달러)	-2.66	-4.15
GDP(%)	0.20	-29.39
수출(%)	6.88	5.04
수입(%)	7.88	23.59

그 대응책 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와 그 대응책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따라서 농정 당국을 비롯한 농민, 소비자,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전 국민적 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UR이 준 교훈을 철저히 되새겨야 할 비상 시기에 직면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와 농업부문에 대한 UR 충격이 오늘의 농업위기를 초래하는데 무엇을 · 어떻게 ·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먼저 구하고, WTO 뉴라운드와 농정 전반에 대응하는 것이 지식 정보화시대의 농정이 취해야 할 기본자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기초정보를 과연 얼마나 가지고 WTO 뉴라운드와 농정 전반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92년을 기준으로 한 UR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0.20%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무역수지는 26.6억 달러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UR협정 이행으로 인해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는 GDP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되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우리 국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농업부문 GDP를 29.4% 감소시킬 만큼 치명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같은 비시장가치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농업부문 GDP 감소액 36억 3천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은 비시장가치의 손실액을 고려한다면 UR이행 후 국민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우리가 삼아야 할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비시장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가치로만 평가하더라도 우리 경제구조에서 농업 손실을 감수하여 전체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농업소득의 감소폭이 크면 클수록 비시장가치를 고려한 실질적 국민후생은 점점 더 감소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주곡작물인 쌀의 생산기반을 사수해야 한다. WTO 농업협상에서는 쌀 생산활동(기반)을

감소시키지 않는 전략개발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여타 작목생산의 교란과 감소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경제-국민경제-한국농업'의 체계적 모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농정 책임자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그럼 93년 UR 협상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WTO라는 협상의 도마 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먼저 산업화로 대변될 수 있는 도시의 근로자와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촌의 농가간의 소득 격차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도·농간 소득격차는 <표 2>에서 잘 나타나듯이 9년(1993~2001년)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01년에는 농가소

<표 2> 도시근로자와 농가간 소득비교

(단위: 천원)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도시근로자 년평균소득(A)	17,734	20,416	22,933	25,832	27,448	25,597	26,697	28,643	31,500
농가소득 (B:전체평균)	16,928	20,31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A/B	1.05	1.00	1.05	1.11	1.17	1.25	1.20	1.24	1.3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표 3> 국내 농가부채 및 전년도 대비 증감율

(단위: 천원)

구 분	YS정권(A)						DJ정권(B)					정권별 평균치 비율 (B/A)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치	1998	1999	2000	2001	평균치	
농 가 부 채	6,828	7,885	9,163	11,734	13,012	9,725	17,011	18,535	20,207	20,376	19,032	1.96
생산성 부 채	5,256	6,191	7,331	9,136	9,781	7,539	12,958	14,054	15,159	15,282	14,363	1.91
가계성 부 채	1,056	1,054	1,110	1,458	1,775	1,291	2,653	3,182	3,882	4,015	3,433	2.66
전년대비 증감율	8.1	-0.2	5.3	31.3	21.8	13.26	49.4	19.9	22.0	3.4	23.68	1.79
차입금상 환및이자	516	640	722	1,140	1,456	895	1,400	1,299	1,166	1,079	1,236	1.3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득에 비해 도시근로자 소득이 1.32배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소득 격차는 결국 농가의 부채 양산으로 이어져 농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며, 결국 자본 재투자를 통한 재생산활동을 제한되어 부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표 3〉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정권별 농가부채의 양상을 보면 소비정부채가 YS정부때보다 2.7배로 급증했다. 농가부채의 정권별 평균치를 보더라도 YS정권때 972만원이며, DJ정권때는 1,903

만원으로 무려 930만원이 증가하여 1.96배나 악화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식량자급률 하락과 농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

당장 올 2월부터 DDA농업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농업 전반에 걸쳐 대외개방 압력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본 협상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여 어떠한 지위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협상 결과가 국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측결과는 김충실교수의 “DDA협상에 의한 시장개방과 우리나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연구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수입국들이 요구하는 UR방식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선진국·개도국 지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 지난 1999년 씨애틀 WTO 각료회의가 열릴때 각국의 민중들이 세계화·신자유주의 반대시위를 벌였다.

〈표 4〉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효과

구 분	선진국 지위 부여		개도국 지위 유지	
	수입국 방식	수출국 방식	수입국 방식	수출국 방식
GDP(%)	0.45	1.88	0.22	1.81
농업 GDP(%)	-19.85	-45.91	-11.13	-43.07
무역수지(십억 달러)	-7.38	-31.51	-3.62	-28.97
농업 무역수지(십억 달러)	-11.23	-47.19	-6.20	-42.93
후생(%)	3.02	7.31	1.66	7.20
후생(십억 달러)	7.00	17.00	4.00	17.00
수출(%)	2.33	10.17	1.08	9.21
수입(%)	4.73	20.31	2.28	18.58



▲ 씨애크를 반세계화시위에 참석한 한국의 농민단체 대표들. 그들은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WTO체제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3%) 및 GDP(0.45%)는 증가하나 무역수지 및 농업 무역수지는 악화(110억 달러)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후생(1.66%) 및 GDP(0.22%)는 미미하게 증가하나 무역수지 및 농업 무역수지 악화(110억 달러 60억 달러), 농업 GDP 감소(20% 11%)의 폭은 크게 줄일 수 있어 개도국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수출국 방식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지위여부를 불문하고 후생 및 GDP증가에 비해 무역수지 악화 및 농업부문 무역수지 악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곡작물인 쌀을 비롯하여 여타 작물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 향후 UR방식의 시장개방과 개도국지위 유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모든 경우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일단 쌀을 포함한 예외 없는 관세화가 추진된다면 주곡자급을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전반에 치명적인 손실이 있게 되므로 쌀의 관세화유에 관철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 다음은 수입

국 입장이 반영되느냐 수출국 입장이 반영되느냐의 문제인데,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개방의 경우 수출국 방식이 관철된다면 국내 농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WTO 농업협상에 있어 적어도 시장개방분야에 있어서는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농업 GDP 및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WTO 농업협상의 시장접근분야에 있어 UR방식에 의한 수입국 입장 반영이 전제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WTO DDA 농업협상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는 UR의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므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국정결정 핵심멤버들은 물론 비농업부문의 리더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논리개발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여 범국민적 농업협상 및 국내 농정 대응책 마련이 우선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직관에 의존해 온 백화점식 정책프로그램의 나열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UR협상의 교훈을 토대로 '한국농업, 농민, 농촌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농업·농정의 지도자들부터 정직하게 직시하고, 당면한 위기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성찰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첨단지식기반의 농업·농정의 과학적 틀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WTO체제 하에서도 국내 농업희생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인봉연